

고려아연, 美에 10조 투자… 영풍 “경영권 방어용” 문제 제기

‘경영권 분쟁’ 새 국면

고려아연, 美와 합작법인 설립하고 10조 규모 제련소 건설 투자 결정 美, 고려아연 지분 10% 보유할 듯 영풍 “국산 광물의 수출종말 초래”



장형진 영풍고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고려아연과 영풍·MBK의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고려아연의 최대주주 영풍은 최근 최윤범 회장이 회사 자금을 우회적으로 사용한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또 고려아연의 미국 10조원 규모 투자에 대해서는 기술 유출 등의 우려를 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영풍측이 사실 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왜곡과 짜깁기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공격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이 날 이사회를 열고 미국 측과 합작법인을 설립해 10조원 규모의 제련소를 건설하는 투자 여부를 결정했다. 투자 금액 중 미국 국방부 등이 2조~3조원을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고려아연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나서 미국 측과의 합작법인이 고려아연 지분 10%를 확보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측이 고려아연 지분 10%를 보유한 주요 주주가 되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된다. 미국이 고려아연을 안보 자산으로 인식하면 경영권 분쟁도 현 최대주주인 고려아연 측에 유리한 구조가 될 수 있다.

실제 미국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고려아연 지분 10%를 확보하면 기존 지분 구조에도 변화가 생긴다. 유상증자로 기존 주주의 지분을 회석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단순 계산 시 영풍 측은 39.70%에서 35.73%로, 최윤범 회장 측은 19.11%에서 17.20%로 각각 줄어들 수 있다.

이에 영풍은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건설에 반대하고 있다. 영풍 측은 “미국 정부가 고려아연 지분에 투자하는 것은 ‘경영권 방어용 백기사’ 구조를 만들려는 포석”이라며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고려아연 지분(10%)을 미국 정부에 내어주는 것은 의결권을 확보해 최윤범 회장의 경영권을 방어해 줄 백기사를 확보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온산제련소에서 생산하는 전략 광물은 대한민국 경제 안보를 지키는 핵심 자산 중 하나”라며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던 물량을 미국 현지 생산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국내산 광물의 수출 종말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미국 제련소 구축은 한국과 미국의 전략 광물 분야 공급망 강화 일환이라며 중요한 사업 협력이라는 입장이다. 미국 제련소를 통해 안티모니, 게르마늄 등 고려아연이 생산하는 전략 광물의 현지 생산 체계를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영풍은 지난 14일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과 지창배 전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가 청호컴넷 투자금 회수와 사업 실현을 위해 고려아연 회사 자금 200억원을 우회적으로 사용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영풍은 “해당 자금 흐름은 회사 이익과 무관하게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 것으로 보이며, 자금 사용의 적정성과 배임 혐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고려아연은 “사실 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왜곡과 짜깁기 됐다”고 항변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고려아연 주주에 오를 경우 경영권 분쟁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며 “미국 정부가 고려아연 지배구조에 영향력을 발휘할 경우 영풍 측은 경영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1면 ‘정용진, 美 AI 수출…’서 계속

롯데, AI 혁신 진행 중 신세계·롯데의 전략 AI 쇼핑시대 새 기회

업계 관계자는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물류 고도화부터 신선식품 가격 책정, 고객 맞춤형 상품 추천 등 무궁무진하다”고 말했다.

경쟁사인 롯데그룹은 이미 AI 혁신에 나섰다. 신동빈 회장의 강력한 의지 아래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판단하는 ‘에이전틱 AI(Agentic AI)’를 전사에 도입하며 유통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롯데 유통군은 지난 8월 ‘제1회 AI 컨퍼런스’를 열고 쇼핑, 상품기획, 운영, 경영지원 등 4대 핵심 분야에 자율형 AI를 적용하는 ‘에이전틱 엔터프라이즈’ 비전을 공식화했다.

이를 위해 전담 조직 ‘라이LA C’ 센터를 신설하고 2030년까지 통합 AI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현재 롯데는 그룹 통합 AI 플랫폼 ‘아이멤버’를 업무 전반에 활용하는 한편, 롯데마트의 신선식품 품질 관리와 세븐일레븐의 경영지원 챗봇 등 실무 영역에서도 AI 내재화를 가속화하며 쇼핑 1번지 재도약을 노리고 있다.

“검색 쇼핑시대의 승자 쿠팡과 네이버 있다면 AI 쇼핑, 새로운 장 열릴 것 신세계·롯데 기회 잡을 수도”

전문가들은 신세계와 롯데의 전략이 AI 쇼핑 시대 전환기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AI 도입 자체가 목적이 아닌, 명확한 문제 해결을 위한 시스템과 신뢰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AI는 쇼핑의 근본적인 고객 여정을 완전히 재설계하는 기술로, 소비자의 검색 비용을 0원으로 만드는 시대를 열었다”고 진단했다. 서 교수는 “검색 쇼핑 시대의 승자가 쿠팡과 네이버였다면, AI 쇼핑 시대는 완전히 새로운 경쟁의 장이 열린 것”이라며 “신세계와 롯데 등 전통 유통 기업들이 외부 AI 기술과의 동맹 등을 통해 다시 한번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AI가 소비자의 의도를 너무 정교하게 파악할 때 느끼는 불쾌한 골짜기를 극복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통한 고객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기술 도입의 선결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단순히 AI 기술을 도입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실행할 시스템과 인프라, 사람에 대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고객 행위 분석과 예측, 배송 루트 및 창고 최적화 등 유통의 각 분야마다 요구되는 모델과 데이터가 다른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 분석과 치밀한 계획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손종욱 기자 kye@

이마트, 신세계푸드 상장폐지 전 지분 공개매수

20% 높은 가격, 주당 4만8120원 내년 1월 5일까지 총 22일간 진행

다. 이는 공개매수 개시일 직전 영업일인 12일 종가(4만100원) 대비 20% 높은 수준이다. 공개매수 기간은 1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총 22일간 진행된다.

이마트는 이번 공개매수를 통해 유통주식 전량을 취득, 신세계푸드를 100% 완전 자회사로 만든 뒤 관련 법령에 따라 자발적 상장폐지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번 결정은 주식시장에서 저평가된 신세계푸드의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 소액주주들에게 시장가 대비 높은 가

격에 투자금을 회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그간 신세계푸드는 낮은 거래량으로 인한 유동성 부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벤류업’ 정책 기조에 맞춰 모자(母子) 기업 중복 상장 구조를 해소하고, 지배구조를 단순화해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

경영 효율성 강화도 주요 목적이다. 이마트는 신세계푸드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함으로써 의사결정 구조를 단일화

해 신속하고 과감한 경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상장 유지 비용 절감은 물론, 실적 변동 압박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인 사업 재편과 시너지 창출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이번 공개매수는 주주 가치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결정”이라며 “앞으로 사업 간 시너지를 극대화해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서울 집값 상승폭 둔화… ‘관망세’ 국면

“일부 재건축 추진단지 중심 올라”

지난달 서울 집값이 상승세는 이어졌지만 상승폭은 다소 둔화됐다. 10·15 대책으로 거래와 대출규제가 대폭 강화되면서 관망세가 짙어졌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내놓은 11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77% 상승했다. 전월 (1.19%) 대비 상승폭은 0.42%포인트(p) 축소됐다.

서울은 월별로 6월 0.95%에서 6·27 대책 이후 7월 0.75%, 8월 0.45%로 상승폭이 둔화됐지만 9월 0.58%, 10월 1.19%로 두 달 연속 집값 상승폭이 커졌다. 10·15 대책으로 상승세가 둔화됐지만 여전히 7, 8월보다 높은 수준이다.

부동산원은 “서울의 경우 시장참여

기재부, 국유재산 ‘헐값 매각’ 원천 금지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

국유재산을 감정가보다 싸게 파는 ‘헐값 매각’이 원천 금지된다. 또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민영화 추진에는 국회 논의가 선행되도록 하는 법·제도의 정비가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앞으로 정부 자산은 단순한 재정수입 수단이 아니라 국가·지역 공동체, 미래세대 이익을 극대화하는 공공재로 그 역할을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당시 윤석열 정부는 국유재산종합계획을 통해 5년간 16조 원 상당의 국유재산을 매각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세수입 부족분을 메우고 민간 활용도를 높인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법정 최저금액인 감정평가액의 절반 수준에 처분한 사례가 늘면서 헐값 매각 지적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일 정부 자산 매각의 전면 중단을 지시한 이후 기재부가 한 달 만에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기재부는 정부 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을 전면 개편한다. 각 부처 및 기관별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매각 전문 심사기구를 신설해 매각 대상 선정과 가격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300억 원 이상 규모의 매각 건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 사전보고를 의무화한다. 50억 원 이상의 매각 건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 매각 전문 심사기구의 보고·의결을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e@